

“왜 우리만”...광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형평성 논란

시 16년만에 조례 제정...내년 1월1일 적용

북구만 조례 개정...4개 자치구는 준비 안돼

광주지역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조례안이 공포된 가운데 자치구별로 적용시기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에 공영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7월 개정했다.

당초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3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또다시 지난 9월 유예를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6대 광역시 중 최저수준의 요금 체계와 불합리한 요금구조를 개선하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변화 등을 반영해 용역을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안은 요금인상 폭과 함께 기존 1~3급지를 1~4급지로 세분화했다.

요금 인상 폭은 1급지 기준 기존 최초 30분까지 700원, 이후 15분마다 350원 부과에서 2시간까지 최초 10분

500원 이후 매 10분 이내 300원으로 바뀌었다.

1일 주차 요금은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8만8000원에서 13만원, 야간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이 각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광주 북구의 경우 광주시의 조례 개정 공포 이후 지난 10월 30일 '북구 주차장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북구 관내 17개 유료 공영주차장 가운데 구청 소유인 7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주차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광주 서구 등 4개 자치구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북구 주차장 이용객의 경우 “과도한 인상이다 왜 북구만 먼저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구 일곡지구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L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요금도 불만인데, 다른 자치구는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면서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야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 조례가 구 조례 보다 상위조례여서 내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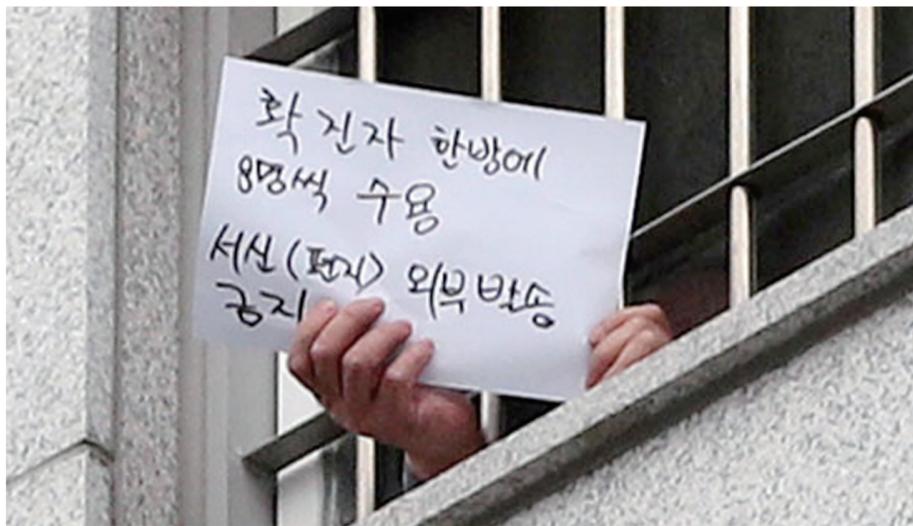


1월1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해도 문제는 없다”면서 “다만,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을 살려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북구 이외에 하지 않는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6년만에 올린 주차

요금은 특·광역시 1급지 평균 2750원의 73%인 2000원으로 조정했다”면서 “6대 광역시중 최저수준의 불합리한 주차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자필 종이 보여주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종이에에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발송 금지’라고 적혀있다.

“미쓰비시 사과·배상말곤 강제매각 중단방법 없나”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무리됐다”며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 이외에는 강제매각을 중단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명령 관련 절차적 요건이 이날과 30일 모두 완료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측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쓰비시측은 협상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피해

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매각 명령 신청을 했으며 압류명령서 공시송달 효력은 이날 2건, 30일 2건이 추가 발생한다.

이로써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모두 마무리된다.

오유나기자

광주 종합병원 의료인 1명 확진...긴급 위험도 평가

에버그린요양원·광주교도소서 추가감염...누적 1067명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연장·홀덤펍·무인카페 방역 강화

2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광장(야외음악당)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 있다.

광주에서 요양원·의료인·교도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9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에버그린요양원 관련 확진자 1명과 기존 의료인 확진자의 지인, 광주교도소 재소자 등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은 확진자 번호가 광주1065번~1067번으로 등록됐으며 격리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1065번은 최근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에버그린요양원 관련자이며 기존 확진자인 1034번과 사우나에서 접촉했다.

이로써 에버그린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지난 22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59명(2명 사망)으로 늘었다.

광주1066번은 광산구 한 종합병원 의료인으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1052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우선 1066번 확진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긴급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환자와 동료 의료인의 전수검사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1052번은 나주지역 한 병원의 의료인이며 관련 감염자는 총 7명이다.

광주1067번은 광주교도소 재소자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1067번은 1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별도의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광주교도소발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시정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기를 다음 달 3일에서 2주 연장한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지난 27일 354명이 검사를 받아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8일 362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당초 임시선별검사소는 다음달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연장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지역만 기입하면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 취약시설인 카지노 카페(홀덤펍)는 집합이 금지되며 무인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내 착석과 취식이 제한된다.

광주지역에는 홀덤펍 58개소, 무인카페 8개소가 있다.

광주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며 “확진자 6명은 2일~7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며 이중 2명은 기존의 확진자 동선과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고 4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